

남북경협 기대감 ‘등실’... 新경제구상, ‘국제화’가 해답

3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훈풍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법 정비해야
한국경제 성장·발전에 영향력 커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신경제구상을 실현하려면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新)보험 만들고, 경험 국제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 간사)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맞이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김규철 국토부 국토정책과장,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영용 남북물류포럼 대표(좌장), 김광길 수문아시아 법률법인 변호사,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김미숙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광길 수문아시아 법무법인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에는 남북 합의서,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이들 분야에서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에 북한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투자보장 등의 법규정을 넘어 시장경제 친화적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에 대해선 신(新) 보험을 출시하고, 경험의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북한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분쟁 해결이 어렵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문을 닫아도 한국 정부에서 남북경협보험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 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B식 새로운 보험 제도를 만들거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3국

을 참여시키는 등 분쟁발생 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남북이 합부로 문을 닫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공동상사중재, 남북중관리위원회 제정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남북합의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도 정비시 ‘상호주의’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했다.

김미숙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존 남북경협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의 남북경협이 배타적 양자거래,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강조되는 경제거래였다면 앞으로는 국제적인 대북경제협력과 병행,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력 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의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제자본이 북한에 투자하는 협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남한 자본의 대북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비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교류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제제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교류활동의 지원, 남북경협과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 정비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책임·부담·합의할 수 있는 ‘상호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형태를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북측을 방문하고 그곳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안전보장, 투자보장, 분쟁해결 방안과 같은 문제들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해결이 시급한 현안과제가 됐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사천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맥쿼리인프라, 3개월 공방... 운용사 교체 찬반 ‘팽팽’

“계속 운영해야” 2곳·“교체” 3곳
주주이익 적정성 여부 두고 해석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맥쿼리인프라·MKIF)의 운용권을 두고 지난 3개월간 벌어진 공방이 곧 매듭을 짓는다. 국내 대표 자문사들의 의견은 팽팽한 상태다. 맥쿼리인프라를 맥쿼리자산운용이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2곳에서 나왔고, 3곳의 자문사가 코람코자산운용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맥쿼리인프라는 오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기존 펀드 법인이 사이자 집합투자업자인 맥쿼리자산운용을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진다.

◆운용 보수 적정성이 ‘핵심’

지난 2006년 상장한 맥쿼리인프라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국내 12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시가총액 3조원 규모의 인프라펀드다. 호주 맥쿼리그룹 소속 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 사옥

/플랫폼파트너스

펀드를 운용해 왔다.

그런데 2015년 설립된 운용자산(AUM) 약 5000억원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플랫폼파트너스가 주주 행동주의를 내걸고 지난 6월 맥쿼리인프라의 보수 구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맥쿼리자산운용이 과다한 보수를 받아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년간 맥쿼리자산운용은 펀드 분배금의 32.1% 수준인 5353억원을 보수로 받아갔다. 이는 다른 인프라펀드 운용 보수 대비 최대 30배 많다는 것이 운용사 교체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플랫폼은 맥쿼리자산운용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인 시가총액 대비 연 0.125%로 변경하라고 맥쿼리인프라에 요구했다.

플랫폼은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운용사를 교체하는 안건을 끌고 주총을 제안했다. 플랫폼이 주장하는 수준과 비슷한 운용보수를 제안한 코람코자산운용을 대체 운용사로 제시했다.

하지만 맥쿼리 측은 플랫폼이 맥쿼리인프라의 운영 구조에 대해 왜곡된 시각에서 잘못된 주장을 펼친다고 맞섰다.

맥쿼리는 맥쿼리인프라를 일반적인 패

시브 펀드와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해외시장 인프라펀드와 비교해봤을 때 보수규모가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운용 보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맥쿼리인프라는 맥쿼리자산운용에 지급하는 기본보수를 약 8%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유사 펀드 대비 10배 수준인 고액 보수가 고작 8% 인하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공방은 법정 다툼으로도 번진 상태다.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 부국증권,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3개사가 공동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 주식 대차거래를 했다는 게 맥쿼리 측 주장이다. 플랫폼은 이 거래가 플랫폼과 무관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플랫폼이 대체 운용사로 제안한 코람코자산운용은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은 기업 2곳 중 1곳이 맥쿼리인프라인 점을 부각시키면서 펀드 보수체계와 운용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대 2, 의견갈린 자문사

맥쿼리인프라 운용사 교체안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도 찬성(글래스루이스·기업지배구조원·서스틴베스트)과 반대(ISS·대신지배구조연구소)로 갈렸다.

의결권 자문사는 운용사 교체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찬성 측은 맥쿼리인프라의 보수구조가 주주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해석했고, 반대 측은 맥쿼리인프라의 운용사를 교체하는데 따른 비용부담과 운용사 교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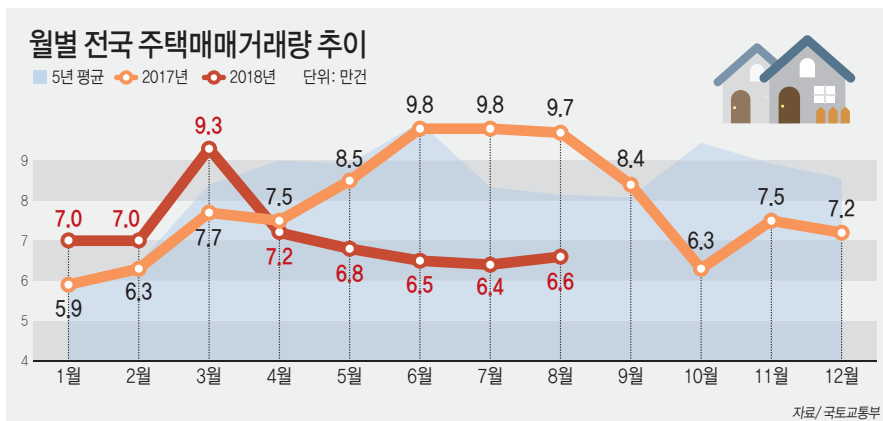
게다가 맥쿼리와 플랫폼 양측은 각자 주주들의 상당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총 표대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셈이다.

차츠헌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인프라 본부장(전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철을 맥쿼리자산운용 대표도 “주주와 운용사 이해를 더욱 일치시킬 방안을 고민해 주총 이후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주총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손영지 기자 sonumji301@

“9·13대책 전에 사자”... 8월 주택 거래량 소폭 상승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5개월 만에 소폭 상승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규제 직전에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5945건으로 전월 대비 3.5%(2258건) 늘어나 5개월 만에 거래량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다만 전년 동월(9만6578건) 및 5년 평균(8만2358건)과 비교하면 각각 31.7%, 19.9%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56만7027건으로 전년 동기 65만2750건 대비 13.1%, 5년 평균 65만6669건 대비 13.7% 각각 줄었다.

지역별도 수도권 거래량(3만8604건)은 전년 동월 대비 32.4%, 지방(2만7341건)은 30.8%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거래량(4만2894건)은 전년 동월 대비 33.3%, 연립·다세대(1만3711건)는 27.1%, 단독·다가구주택(9340건)은 30.7% 각각 줄었다.

이달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089건으로 전년 동월(14만3841건)과 전월(14만9458건) 대비 각각 5.7%, 1.8%씩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집계됐다. 이 전년 동월(42.1%) 대비 0.7%포인트, 전월(41.7%) 대비 0.3%포인트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수도권 거래량(10만1280건)은 전년 동월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늘었다.

아파트 거래량(7만1956건)은 전년 동월 대비 6.8% 늘었으며 아파트 외(8만133건) 거래량도 4.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8만9191건)과 월세(6만2898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2%, 3.8%씩 늘었다.

글/채신화 기자 csh9101@